

정부 공모 로봇랜드·복합의료단지 어떻게 돼가나

“지역 산업지도 바꾼다” 지자체 사활건 유치전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인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사업자가 최근 인천시로 결정되면서 ‘로봇랜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이 재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천700억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로봇랜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민자와 재정이 동시 운영되는 사업이어서 사업 규모도 신청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조원을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해 지역 산업지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로봇랜드 예정지는 10월 열리는 산자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당초 로봇랜드 예정지는 9월초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도 타사보다 적은 4천300억원(국비 413억원, 시비 247억원, 민자 3천640억원)으로 잡았다.

시는 정·관계, 경제계, 언론, 사회단체 등 시민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지역의 각계 80여 단체들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광주유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다.

전남은 해남화원관광단지 500만㎡부지에 총사업비 9천687억원을 투입해 로봇랜드소재장과 로봇동식물원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특히 사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동시에 엑스포과학공원을 이용해 로봇랜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경북은 포항·경주에 로봇랜드 및 로봇기술전시장을 내놓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도 치열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랜드, 광주·전남 등 11곳 신청 10월 결정

의료단지, 사업비 1조 1천억 10곳 유치 경쟁

결정될 방침이었으나 자치구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정부가 선정을 한 달 가량 미룬 것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이며, 사업 규모(사업비 등)는 유치 신청 지자체가 결정해 신청한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광주·부산·인천·울산·대구·대전 등 6개 광역시와 전남·경기·경남·경북·강원 등 5개 광역도 등 총 11개 광역지자체는 유치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역 각계의 모든 체면을 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에도 로봇과 관련한 시설을 포함시켜 로봇랜드 조성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조성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안에 추가 조성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와 토지 보상이 80%이상 완료된 상태여서 최단 기간 내에 사업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항·철도·고속도로 등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우수한 것도 장점이다.

또한 추가 토지 매입비 등이 거의 들지 않는 등 사업비의 증폭부자를 최소화

의료복합단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조 1천400억원(국비 2천200억원, 지방비 1천700억원, 민자 7천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8년 1월 입지선정평가단을 구성,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2월 안에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한다.

광주와 원주, 대전, 제주도, 대구, 포항, 부산, 진해, 오송 등 10개 지자체가 유치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 한국 BIO-IT광주센터 건립,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의학·생명 과학융합센터 설립 등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온 점과 타 지역 보다 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이 풍부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30년 동안 20조 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으며, 충북 오송도 생명과학단지를 내세워 적지 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원 원주도 의료기지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 등을 주장하며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엑스포 유치 결정 D-100

③ 치밀한 전략·전술 세워라

개도국 경협 확대 신뢰 구축해야

고정·유동표 구분 국가별 접근 전략 필요

정부 외교력·민간 기업 네트워크 총가동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7일)을 앞두고 한국(여수),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유치 신청국의 물밑 경합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한국이 앞선 경제력과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우세를 지키고 있다는 평이지만 모로코의 추적이 만만치 않다. 승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유치 전략과 전술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상황별 대응 논리를 개발해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로코에 민감해야=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지난해 말 98개국에서 22일 현재 101개국으로 늘었다. 올해 신규가입한 시리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 3개 국가는 BIE의 ‘지지구가 가입 권유 금지’를 어긴 모로코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의해 회원국이 됐다. 평이다.

이에 맞서 한국도 우수방관하지 말고 우호 국가를 신규회원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친 모로코 성향의 신규가입국에 대해 한국이 모로코가 기여할 수 없는 부분을 제공하며 접근해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역발상’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뢰 구축과 치밀한 득표 전략=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전에서는 투표국에 대한 지원이 상식,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력을 통해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고정 지지국과 유동적인 성향 국가를 구분해 적절한 득

표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한 번 이뤄진 약속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신뢰를 잃지 않아야 승산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결선투표에 대비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BIE 규약상 유치 신청 3개국 이 나서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개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다. 따라서 1차 투표 1, 2위 국가가 벌이는 결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득표전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의 현재 득표전략은 1차 투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차 투표에 대한 면

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해외 유치활동과 함께 오는 9월 12~15일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제심포지엄에서 회원국별로 적절한 접근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인 득표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민간 네트워크 극대화=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해외진출 민간기업의 현지 교섭력 극대화가 엑스포 유치의 관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정부의 공식 유치활동이 엑스포 유치의 토대라면 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춘 기업의 노력은 표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활력소’다.

현재 엑스포 유치에 동참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현대·기아차, LG 등 총합이 20여 개에 이른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소재 국가별로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2012 여수엑스포 유치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평당원 모임 소속 회원들이 26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협뉴스

한나라 이번엔 李-朴 대리전?

원내대표·최고위원 등 잇단 선거
勢대결 우려속 치열한 승부 예고

대통령후보 경선을 마친 한나라당이 크고 작은 당내 선거를 잇따라 치르도록 돼 있어 이명박 후보측의 당 당장 여부와 이 후보측 및 박근혜 전 대표측간 세대결 재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 부작용을 우려해 당내 모든 선거 일정이 경선후로 조정되면서 27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비롯해 공석인 2명의 최고위원 선출, 다음달 19일로 임기가 연장된 시·도당위원장 선거 등이 풀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강력한 전국위원회 의장의 임기도 이달로 끝나 새 전국위원장도 선출해야 하며 다음달 9일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선출 절차도 불가피하다.

한 당직자는 26일 “최고위원의 경우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선출할 예정이며 9월말께로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위원의 경우 당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고, 시·도당위원장의 경우 각 지역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란 점에서 당내 기반확보가 시급한 이 후보측과 장기적 진지구축을 내다봐야하는 박 전 대표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워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 관계자는 “시·도당위원장 선거를 포함한 당직 재편 과정에서 세력균형이 깨지고 이 후보측 인사로 대거 물갈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박 전 대표 본인이 화합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켜보고 있지만 향후 이 전 시장측과 만남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 등이 고루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다시 세대결이 펼쳐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인식을 양측 모두 공유하고 있어 많은 정치적 고려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였던 이 후보 지지성향의 안상수 의원과 박 전 대표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낸 이규택 의원의 맞대결은 이규택 의원이 도전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 원내대표에는 안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이 후보측의 무난한 연착륙이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주) 조이트레블, including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